

“청소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23.(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만나고 싶은 청소년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사회자
- 결과 총평: 피아(제정연대, 청소년 공약 설문조사기획팀)

2. 주요 공약별 청소년단체 발언

- 윤서(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김찬우(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 윤달(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이아란(민중당 18세 선거운동본부)

3. 정당 답변 결과 총평 : 조영선(제정연대 정책공약팀)



I. 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공약 설문조사 결과

**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청소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 조사 기간 : 3월 5일(목) ~ 3월 15일(일)
| 참여 대상 : 만18세 미만 청소년, 만18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 깜짝 선물 : 참여하신 분 중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 구글 링크 주소

 **국립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3월 5일(목)~3월 15일(일)
- ☞ 참여 대상 : 만18세 미만 청소년, 만18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2. 조사 내용

1) 질문의 구성 (총 21개 항목)

- ① 학생인권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 만나고 싶은 학생인권 공약
- ② 으_른들끼리의 국회는 이제 그만! - 만나고 싶은 청소년 참정권 공약
- ③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 만나고 싶은 청소년인권 공약

2) 질문 항목

- 1. 학생인권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학생인권' 공약 3가지를 꼽아주세요
- [학생인권법 제정] 두발·복장 단속, 휴대폰 사용 금지, 소지품 압수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 [인권침해 학칙, 아웃]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은 즉각 없애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 [언제까지 학생만 빼고?] 학교를 운영할 때, 입시/교육제도 등을 바꿀 때 학생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과열경쟁 축소] 학생을 숨 막히게 만드는 과열경쟁교육과 학습부담, 당장 줄이겠습니다
- [학생을 위해 일하는 기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책임자는 징계받고, 피해학생은 온전히 지지받는 기구를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만들겠습니다
-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SNS, 대자보,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작성 기준, 별점, 학칙, 법률을 바꾸겠습니다
- [교육감부터 학생인권교육] 학생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육감, 교육부/교육청 직원, 교사부터 학생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2. 으_른들끼리의 국회는 이제 그만! -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 참정권' 공약 3가지를 꼽아주세요

- [선거연령 더 낮추자]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 등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보다 더 낮추겠습니다
-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을 대변하는 청소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출마) 연령을 만25세보다 대폭 낮추겠습니다
- [지지/반대 의견에 왜 나이 제한?] 청소년도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치에 대해 알 권리]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 등 정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소년을 환영하는 정당] 정당 가입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정당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당법을 고치겠습니다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청소년 참여기구에 들어갈 때 나이 제한, 학교 추천 등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의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3.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인권' 공약 3가지를 꼽아주세요

- [어리다고 갑질 금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폭력, 무시, 갑질 등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만들겠습니다. 통제가 아닌 진짜 보호와 존중을 제공하는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 [쉽과 놀이가 있는 청소년기] 적절한 휴식과 자유시간에 대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강제 학습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차별 금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범죄피해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평등을 위한 성교육] 쓸모없는 성교육은 이제 그만. 청소년의 성(性)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는 성교육/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소년 알바 존중]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일하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 [노키즈존 폐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피시방, 찜질방 등 여가, 숙박시설 이용에서 청소년을 배제

하는 법률이나 관행을 고치겠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대해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집), 청소년 친화적인 문화공간, 청소년 복지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책]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탄소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3. 조사 결과

1) 결과 개요

- 응답자 분포 : 전국 2,430명 시민 참여/ 이 가운데 2000년대생 청소년은 1,848명/ 이 가운데 만18세 유권자는 266명
- 비청소년과 청소년 전체, 만18세 유권자들의 응답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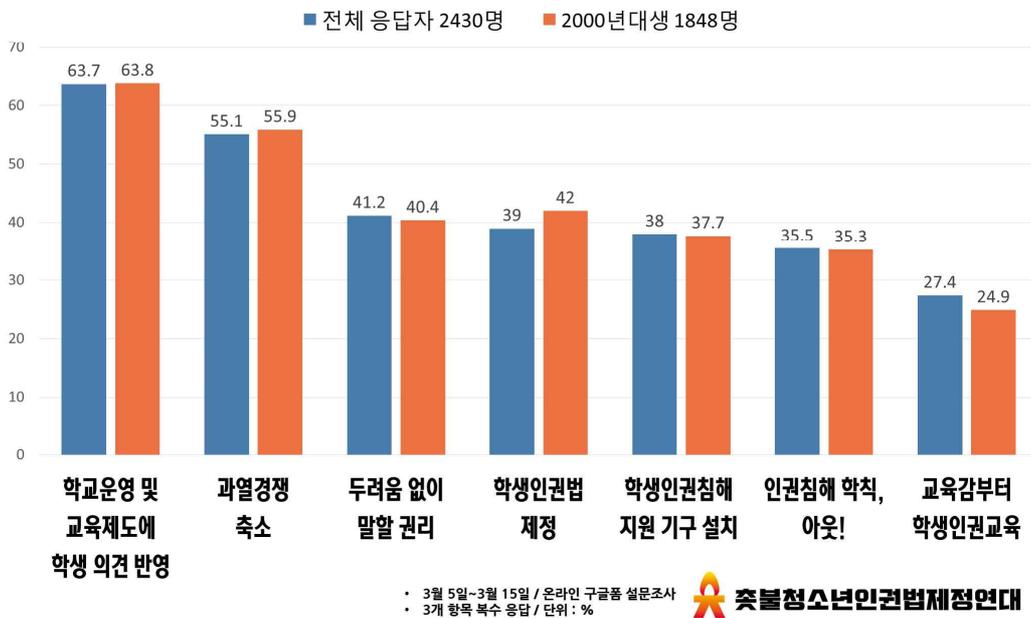
질문		전체 응답자 2,430명		2000년대생 1,848명	
		비율	순위	비율	순위
학생인권 분야	1. 학생인권법 제정	39.0%	4	42.0%	3
	2. 인권침해 학칙, 아웃!	35.5%	6	35.3%	6
	3. 언제까지 학생만 빼고?	63.7%	1	63.8%	1
	4. 과열경쟁 축소	55.1%	2	55.9%	2
	5. 학생을 위해 일하는 기구	38.0%	5	37.7%	5
	6.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41.2%	3	40.4%	4
	7. 교육감부터 학생인권교육	27.4%	7	24.9%	7
청소년 참정권 분야	1. 선거연령 더 낮추자	37.2%	6	34.6%	6
	2.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39.0%	5	38.0%	5
	3. 지지/반대 의견에 왜 나이 제한?	65.1%	1	65.7%	1
	4. 정치에 대해 알 권리	60.3%	2	59.5%	3
	5. 청소년을 환영하는 정당	39.8%	4	39.7%	4
	6.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58.6%	3	62.4%	2
청소년인권 분야	어리다고 갑질 금지	50.7%	1	52.9%	1
	쉽과 놀이가 있는 청소년기	41.2%	4	39.6%	4
	차별금지	46.7%	2	43.7%	3
	평등을 위한 성교육	38.8%	5	38.0%	5
	청소년 알바 존중	43.6%	3	47.9%	2
	노키즈존 폐지	16.8%	8	18.6%	8
	청소년을 위한 예산	35.6%	6	33.4%	6
	기후위기 대책	26.5%	7	25.9%	7

- 응답 결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요구해온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만나고 싶은 학생인권 총선 공약

- 총 7가지 공약 후보 중 전체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공약은 ‘[언제까지 학생만 빼고?] 학교를 운영할 때, 입시/교육제도 등을 바꿀 때 학생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로 나타났다. 2순위는 ‘[과열경쟁 축소] 학생을 숨 막히게 만드는 과열경쟁교육과 학습 부담, 당장 줄이겠습니다’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가 선택한 3순위 공약은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SNS, 대자보,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작성 기준, 별점, 학칙, 법률을 바꾸겠습니다’였던 반면, 2000년대생 청소년이 꼽은 3순위 공약은 ‘[학생인권법 제정] 두발·복장 단속, 휴대폰 사용 금지, 소지품 압수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이었다.

가장 만나고 싶은 학생인권 총선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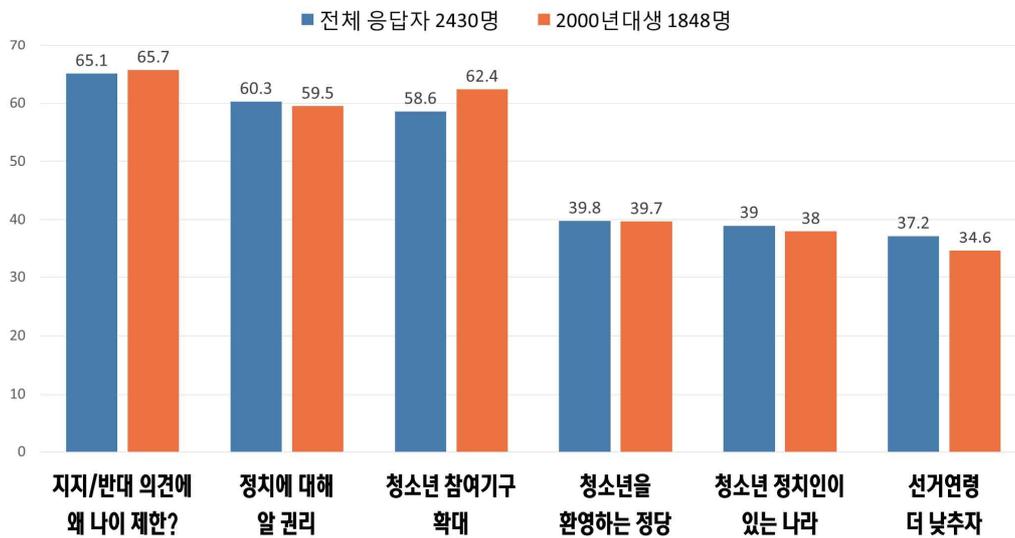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학생인권침해시 신고 및 해결 기구 설치, 인권 침해 학칙 개정, 학생인권교육 의무화 등 공약 후보의 대다수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이다.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세부 내용을 풀어서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3) 만나고 싶은 청소년 참정권 총선 공약

- 총 6가지 공약 후보 중 전체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공약은 ‘[지지/반대 의견에 왜 나이 제한?] 청소년도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로 나타나, 선거 운동의 자유 또는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순위로는 ‘[정치에 대해 알 권리]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 등 정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가, 3순위로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청소년 참여기구에 들어갈 때 나이 제한, 학교 추천 등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의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가 꼽혔다.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참정권 총선 공약!



· 3월 5일~3월 15일 / 온라인 구글폼 설문조사
· 3개 항목 복수 응답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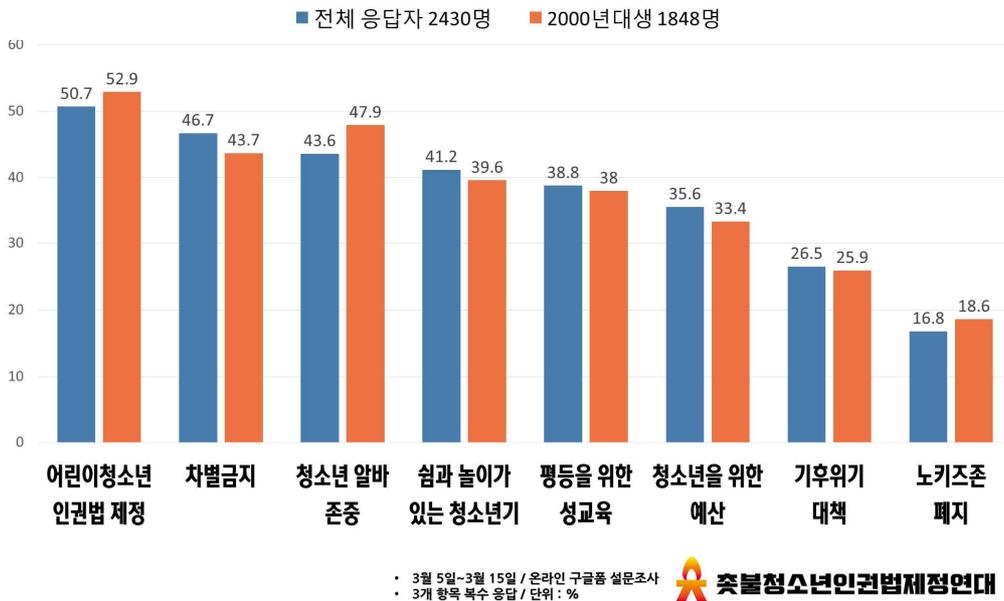
-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자유’ 보장, ‘정치 교육 확대’가 1~2순위를 차지한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거연령 추가 하향은 최근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선택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이 공약 후보를 채택, 만18세 선거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4) 만나고 싶은 청소년인권 총선 공약

- 총 8가지 공약 후보 가운데 1순위는 ‘[어리다고 갑질 금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 무시,

갑질 등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만들겠습니다. 통제가 아닌 진짜 보호와 존중을 제공하는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차별 금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범죄피해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가 2순위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7.9는 3순위로 '청소년 알바 존중'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일하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를 꼽아 청소년들의 생계가 걸린 아르바이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이 드러났다.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인권 총선 공약!



○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 알바 존중, 쉼 권리 보장, 청소년 예산 확대 등을 위해서도 1순위로 꼽힌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4. 공약 후보 설명: 왜 필요한가

Pat 1. 학생인권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1. [언제까지 학생만 빼고?] 학교를 운영할 때, 입시/교육제도 등을 바꿀 때 학생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부당한 교칙을 바꾸고자 해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 대학입시 공론화위원회에도 정작 학생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반영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2. **[과열경쟁 축소]** 학생을 숨 막히게 만드는 과열경쟁교육과 학습부담, 당장 줄이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서열화된 대학, 우열반, 강제야간자율학습 등 입시/경쟁 중심 교육을 공고히 하는 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시험과 경쟁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OECD 국가 중 학습시간이 제일 길다.
3.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SNS, 대자보,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작성 기준, 별점, 학칙, 법률을 바꾸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학생이 학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sns에 올리면 징계를 받는다. 학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sns나 학내 대자보를 통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들을 협박하고 별점, 학칙, 법률 등으로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
4. **[학생인권법 제정]** 두발복장 단속, 휴대폰 사용 금지, 소지품 압수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행동인지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규정을 강요받고 학교와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휘둘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복장 단속, 체벌과 야간 강제학습, 소지품 압수 등 반인권적인 규제들이 더 심각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인권법이 보장되고 학생과 교사간 존중과 신뢰가 싹트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5. **[학생을 위해 일하는 기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책임자는 징계받고, 피해학생은 온전히 지지받는 기구를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만들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학교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온전히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피해를 입고도 혼자 감당하며 고통스럽게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교사에게 당한 부당한 피해를 주변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귀찮은 존재로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옹호관 같은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6. **[인권침해 학칙, 아웃!]**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은 즉각 없애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다수의 학칙에 '교사지시불이행'시 징계 받는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징계하는 항목들이 들어있다. 휴대폰 압수, 복장과 두발 규제 등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에게만 과도하고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가하는 학칙은 없애야 한다.
7. **[교육감부터 학생인권교육]** 학생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육감, 교육부/교육청 직원, 교사부터 학생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학생들은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육당국이나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무시한다.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학생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들이 학생을 존중

하는 법을 모르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는 큰 위협이다. 따라서 교육감, 교육부/교육청 직원, 교사부터 학생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Pat 2. 어른들끼리의 국회는 이제 그만!

- [지지/반대 의견에 왜 나이 제한?] 청소년도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 기간에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말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되어 버린다.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말한 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투표를 못한다고 해서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청소년도 선거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치에 대해 알 권리]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 등 정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과 모의투표를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은 정치를 알아선 안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도 모두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청소년 참여기구에 들어갈 때 나이 제한, 학교 추천 등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의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참여기구가 있지만, 참여하려면 교사나 학교장 등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고 나이도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청소년 참여기구의 결정권이나 실질적 권한도 미약하다. 청소년들이 더 쉽게 원하는 참여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이름뿐인 참여기구가 아닌 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하는 참여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을 환영하는 정당] 정당 가입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정당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당법을 고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동등한 당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존중하는 정당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을 대변하는 청소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출마)**

연령을 만25세보다 대폭 낮추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25세여서 청소년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변하고 청소년의 삶의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은 정치적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은 청소년에 대한 편견 중 하나이다. 피선거권 연령을 대폭 낮추어 나이의 장벽 없이 청소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선거연령 더 낮추자]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 등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보다 더 낮추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중 극히 일부만 포함된다. 여전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활동에도 제약이 많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만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확대했다. 한국도 선거권 연령을 더욱 더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Pat 3.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는 이제 그만!

1. [어리다고 갑질 금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폭력, 무시, 갑질 등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만들겠습니다. 통제가 아닌 진짜 보호와 존중을 제공하는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어린이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쉽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진다. 심지어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어린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적 학대, 높은 아동 자살률,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차별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어린이, 청소년도 그 자체로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차별 금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범죄피해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 **왜 필요한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들의 92%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은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 중 여성 청소년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우범소년' 개념을 두어 조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차별받거나 혐오, 배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

3. [청소년 알바 존중]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일하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청소년의 노동을 동등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불이행이나 산재, 반말, 갑질 등에 시달리며 우리 사회 밑바닥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서울 학생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하는 청소년 노동자 2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쉽과 놀이가 있는 청소년기]** 적절한 휴식과 자유시간에 대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강제 학습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율이 높다. 어른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학습노동시간,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열풍 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학습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강제야간학습과 주입식 수업운영을 억제하고 과도한 학습의 폐해를 알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5. **[평등을 위한 성교육]** 쓸모없는 성교육은 이제 그만. 청소년의 성(性)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는 성교육/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학생 성교육 표준안에서 '여성의 바른 옷차림은 치마'라고 명기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많다. 현재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성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6.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대해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집), 청소년 친화적인 문화공간, 청소년 복지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책의 시작이다.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 공간마련, 청소년 기본소득 등 청소년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기후위기 대책]**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탄소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지난 2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방식은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재난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청소년 스스로가 하고 행동에 옮긴 결과다. 청소년은 물론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 **[노키즈존 폐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피시방.찜질방 등 여가.숙박시설 이용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법률이나 관행을 고치겠습니다.

☞ **왜 필요한가** : 공공도서관에서 성인 열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 10시 이후 보호

자를 동반하지 않는 청소년의 입장이 금지된 피시방과 찜질방 등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많이 있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공공시설에서 배제되어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은 곧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며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II. 청소년인권 공약 추진 여부에 관한 정당 단변 결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당 대상 정책 질의 결과

2020. 3. 2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

정책질의 개요

- 정책질의 시기: 2020. 3. 6. ~ 3. 16.
- 정책질의 대상: 35개 등록 정당(2020. 3. 6. 기준)
 - * 팩스/이메일/전화 등으로 연락되지 않는 정당은 제외
- 응답률(전체): 31.4%(35개 정당 중 11개 정당만이 응답)
- 응답률(원내 정당): 40%(10개 정당 중 4개 정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래 ‘연대’)는 지난 2020년 3월 6일 ① 학생인권법 제정(7개 세부과제), ②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7개 세부과제), ③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5개 세부과제)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문의하는 내용의 질의서(참고자료1)를 총 35개 정당에게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하였음

* 질의서 발송 정당(35개): 가자코리아당, 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공화당, 국가부패척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국제녹색당, 기독교당, 기독교자유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대민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공화당, 자유의새벽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직능자영업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 연대는 2020년 3월 16일까지 회신을 받았고, 회신한 정당은 11개, 회신하지 않은 정당은 24개, 명시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정당은 1개이었음.

* 회신한 정당: 가자환경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직능자영업당

□ 원내정당(10개 정당) 중에서는 4개만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음,

* 회신한 원내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 회신하지 않은 원내정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 이처럼 연대의 정책질의서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정당(전체: 31.4%, 원내: 40%)만이 답변한 것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임.**

2

<정책 1: 학생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 학생인권법 제정 정책 7개 세부과제, 9개 정당 “전부 추진”, 2개 정당 “대부분 추진”
- 11개 정당 전부,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 “추진”
- 더불어민주당 2개 사항에 대한 “기타(보류)” 의견, 국민의당 3개 사항에 대해 “기타(이유불명)” 의견, 정의당 “추진, 다만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의견

□ 연대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첫 번째 정책은 학생인권법의 제정으로, **학생 인권을 법률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연대는 위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 7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하였음

- ①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결사의 자유 등 학교 내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
- ②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 두발·복장·용모의 단속, 휴대폰·소지품 압수, 강제야자·반성문 요구 등 인권침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③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④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학생이 직접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⑤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

- ⑥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학생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구를 설치
 - ⑦ (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 교육감, 교사, 학부모, 학교 등 학교생활에 관리자들에 대한 학생인권규율 의무화
- 11개의 정당 중 9개의 정당은 7개의 세부과제를 전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개의 정당이 세부과제 일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
- * 전부 추진 의사를 밝힌 정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직능자영업당
- 7개의 세부과제 중 ①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③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⑤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은 11개 정당이 전부가 “추진” 입장을 밝혔음
-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①과 관련하여 ‘기타’ 입장을 밝히며 교육기본법 또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 또한 법률차원에서의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에 해당하므로 추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됨
- 3개 정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7개의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 “기타”의 입장 등 의견을 부기하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세부과제 중 ③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④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⑤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이 21대 총선 공약사항임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세부과제 중 ②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와 ⑦ 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에 대해 “기타” 입장을 표시하였음
 - ②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개선은 필요하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⑦에 대해서는 교육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세부과제 중 ②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 ④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⑥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에 대해 “기타” 입장을 표시하였음. 그러나 “기타” 의견을 표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 정의당은 학생인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다만 정의당은 상황 및 기존 법률의 내용에 따라 개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모두 법률에 반영하겠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세부 사항의 실현 의지가 불명확한 점이 있음

3

<정책2: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정책 7개 세부과제, 10개 정당 “전부 추진”, 1개 정당도 1개 과제 제외 기타의견 외 “전부 추진”
- 11개 정당 전부, 직·간접적 차별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정책 수립 시 의견 청취 의무화,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 6개 과제 “추진”
- 국민의당 1개 과제에 대한 “기타(보류)” 의견, 정의당 “추진, 다만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의견

□ 연대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두 번째 정책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의 제정으로,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법률의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연대는 위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 7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하였음

- ① (직·간접적 차별 금지)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
- ②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에게 여가와 휴식의 기회를 법률의 차원에서 보장
- ③ (의견 청취 의무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어린이·청소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
- ④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의무로서 제공
- ⑤ (지역 간 격차해소) 어린이·청소년의 차별없는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간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명시
- 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일을 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권리로서 보장

- ⑦ (인권침해구제기구의 설치)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
- 11개의 정당 중 10개의 정당은 7개의 세부과제를 “전부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개의 정당은 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기타 의견을 밝혔음
 - * 전부 추진 의사를 밝힌 정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직능자영업당
- 11개의 정당 전부가 ① 직·간접적 차별 금지 ②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③ 의견 청취 의무화 ④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⑤ 지역 간 격차 해소 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대해 “추진” 입장을 밝혔음
- 국민의당은 7개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에 대해 “기타”의 입장을, 정의당은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부기하였음
 - 국민의당은 세부과제 중 ⑦ 인권침해구제기구 설치에 대해 “기타” 입장을 표시하였음. 그러나 “기타” 의견을 표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 정의당은 학생인권법 공약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공약에 제시할 것이라 밝혔음
 - 다만 정의당은 상황 및 기존 법률의 내용에 따라 개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모두 법률에 반영하겠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세부 사항의 실현 의지가 불명확한 점이 있음

4

<정책3: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5개 세부과제, 8개 정당 “전부 추진”
- 더불어민주당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타” 의견
- 국민의당 1개 과제 “기타” 의견, 2개 과제 “추진 어려움” 의견, 가자환경당 1개 과제 “기타” 의견

□ 연대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세 번째 정책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 및 정당법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함**. 연대는 위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 5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하였음

- ① **(선거운동의 권리 보장)**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전면 박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 ② **(모의투표 및 선거교육 보장)**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폭넓은 모의투표와 선거교육을 보장
- ③ **(피선거권 연령 하향)** 어린이·청소년의 피선거권(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박탈하는 연령 제한 규정을 하향
- ④ **(선거권 연령 하향)** 어린이·청소년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연령 제한 규정을 하향(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⑤ **(정당가입 및 활동 연령제한 폐지)** 어린이·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박탈하고 있는 정당법 등 개정

□ 11개의 정당 중 8개의 정당은 5개의 세부과제를 “전부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전부 추진 의사를 밝힌 정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직능자영업당

□ 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세부과제 전부에 대해 “기타”의견을 표시하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

- 세부과제 중 ① **선거운동의 권리보장**, ② **모의투표 및 선거교육 보장**, ④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세부과제 중 ③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상 연령 하향에 동의하지만, 어린이의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세부과제 중 ⑤ **정당가입 및 활동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당가입과 교육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기타” 의견을, 2개의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어려움” 의견을 표시하였음

- 세부과제 중 ① 선거운동의 권리보장에 대해 “기타” 의견을 표시하였음.
그러나 “기타” 의견을 표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 세부과제 중 ③ 피선거권 연령 하향, ⑤ 정당가입 및 활동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추진 어려움”을 표시하였음
- 가자환경당은 ⑤ 정당가입 및 활동 연령제한 폐지 “기타” 의견을 표시하였음. 그러나 “기타” 의견을 표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참고자료1

정책질의 결과 요약표

1

<정책 1: 학생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구분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인권침해행 위 명시적 금지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인권침해 학교생활규 정 폐지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
가자 환경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국민의당	추진	기타 (이유불명)	추진	기타 (이유불명)	추진	기타 (이유불명)	추진
기본 소득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노동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녹색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대한 민국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더불어 민주당	기타 (추진)	기타 (보류)	추진 (공약)	추진 (공약)	추진 (공약)	추진	기타 (보류)
미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민중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정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직능자 영업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2

<정책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구분	직·간접적 체벌 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의견 청취 의무화	성인지적·성 평등 교육 의무화	지역 간 격차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인권침해구 제기구의 설치
가자 환경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국민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기타 (이유불명)
기본 소득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노동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녹색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대한 민국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더불어 민주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미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민중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정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직능자 영업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3

<정책3: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정당 회신결과

구분	선거운동의 권리 보장	모의투표 및 선거교육 보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 및 활동 연령제한 폐지
가자 환경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기타 (이유불명)
국민의당	기타 (이유불명)	추진	어려움	추진	어려움
기본 소득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노동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녹색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대한 민국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더불어 민주당	기타 (보류)	기타 (보류)	기타 (보류)	기타 (보류)	기타 (보류)
미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민중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정의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직능자 영업당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4

주요 정당의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회신결과 요약표

구분	학생인권침해 행위 명시적 금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결권	인권침해 학칙 폐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 연령 폐지
더불어민주당	△	○	○	○	△	△
국민의당	△	○	△	○	△	×
기본소득당	○	○	○	○	○	○
노동당	○	○	○	○	○	○
녹색당	○	○	○	○	○	○
미래당	○	○	○	○	○	○
민중당	○	○	○	○	○	○
정의당	○	○	○	○	○	○
가자환경당	○	○	○	○	○	○
대한민국당	○	○	○	○	○	○
직능자영업당	○	○	○	○	○	○
미래통합당, 민생당, 이외의 23개 정당은 ‘응답 없음’						
○: 추진 △: 일부추진 ×: 추진이 어려움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수신	각 정당
	발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일시	2020년 3월 6일
	문의	서채완 변호사 02-522-7283 (chaewans@minbyun.or.kr)

[회신 요청]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질의서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법 및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입니다([붙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참고).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 청소년이 만나고 싶은 총선공약>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종료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위 설문조사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귀 정당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20. 3. 16(월)까지 chaewan.s@minbyun.or.kr 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각 정당에서 보내주신 답변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튜브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참고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각 정당의 회신여부 또한 분석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정책1**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학교 내 학생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학교생활규정, 학교 내 체벌 등 폭력과 인권 침해에도 학생이 그 피해를 호소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생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정책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		
	추진하겠음	추진 어려움	기타
○ 학생의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결사의 자유 등 학교 내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			
○ 두발·복장·용모의 단속, 휴대폰·소지품 압수, 강제야자·반성문 요구 등 인권침해행위의 명시적 금지			
○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학생에 의한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및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결권 보장			
○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구의 설치			
○ 교육감·교사·학부모·학교 관리자에 대한 학생인권교육 의무화			

정책2**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기본법 제정)**

어린이·청소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제3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정책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		
	추진하겠음	추진 어려움	기타
○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차별 금지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어린이·청소년의 의견 청취 의무화			
○ 성인지적,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한 교육의 의무화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있어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의 해소			
○ 일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차별을 구제하는 구제기구의 설치			

정책3**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을 금기시하며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정책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		
	추진하겠음	추진 어려움	기타
○ 어린이·청소년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의 참여할 권리 확대를 위한 폭넓은 모의투표 및 선거교육 보장			
○ 어린이·청소년의 피선거권(대통령, 국회의원 등) 연령 제한 규정 하향			
○ 어린이·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연령 규정의 하향(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률에 관한 법률 등)			
○ 어린이·청소년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연령 규정 폐지 및 정당활동의 보장			